

# 歷史的으로 본 大學의 葛藤

朴 奉 穆

(嶺南大 教育學科)

## 1

本稿에서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大學發展 過程에서 일어난 價值 葛藤에 대해서 歷史的으로 論議하고자 한다.

高等教育制度 속에는 構造的으로 그 本質의 問題에 있어서 서로 相反되는 反對 主張과 不一致가 있고 또한 折衷과妥協의 要素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학 발전에 있어서 價值 葛藤은 不可避한 요소이기도 하다. 물론 超克이 없는 갈등 그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挑戰할 만한 價值의 갈등마저 가지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우리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歷史的으로 해방 이후 한국 대학들이 걸어 온 발자취를 돌아 볼 때 2기에는 外的인 많은 變化와 教育 內的인 混屯과 構造的인抵抗이 있었다. 또한 大學教育의 本質的 問題나 理念 등을 둘러싼 價值觀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갈등에 대하여 政府, 社會, 財團 그리고 大學人们이 각자 理性에 立脚하여 知性的으로 問제를 탐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努力하였던가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자못 懷疑的이다.

무릇 大學이 存在하기까지에는 그 대학이 實現해야 할 理念이 있고, 그 理念을 成就하기 위해서는 또한 표방해야 할 중요한 價值들이 있다. 그러나 經驗的으로 大學이 實現해야 할 具體的인 價值가 무엇이며, 또한 大學의 具體的인 存在樣式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意見의 一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것은 마치 “네 父母를 공경하라”는 당위적인 윤리적命題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見解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大學의 갈등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接近方式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갈등 主體로서의 大學과 政府, 大學과 社會, 大學과 財團 그리고 大學內 각 機關, 또한 大學構成員들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問제를 밝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갈등의 istrace 또는 對象으로서의 대학교육과 관련된 가치 갈등에 대해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물론 이 두 接近方式은 경우에 따라서 相互交叉點을 가지게 되며 공통된 問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러나前者가 주로 사람 또는 조직체 중심의 外的 관계 규명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면,后者는 주로 논쟁적인 問제(issue) 중심의 內的 分析에 치중한다. 本稿는 주로 後者의 接近方式에 의해 대학교육 발전에 있어서 논쟁적인 성격을 가진 중요 問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치 갈등에 대해서 論議를 展開한다.

大學이 안고 있는 問제는 수 없이 많고 이들 問제에 대한 가치 갈등 역시 매우 多樣하다. 따라서 무엇이 대학 발전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必要不可缺한 중요한 問제인가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容易하지 않다. 이러한 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대학을 바라보는 智慧를 찾아야 한다. 時代와 場所와 대학의 特性에 따라 대학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대학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

인 像과 一般的인 理念과 存在理由 등 大學教育이 志向하는 歷史的인 方向이 대체로 定義되어 온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

筆者는 역사를 통해 대학이 일반적으로 志向해 온 價值를 中心으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학의 가치 갈등의 양상을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높은 學的 標準을 유지하기 위한 대학의 學問의인 優越性(academic par excellence)을 유지하는 일이다. 둘째는 하나의 自治單位의 인 性格을 지니고 출발한 中世大學에서부터 시작하여 大學社會의 한 特성이 되어 온 대학의 自律性(autonomy)과 民主化를 실현하는 문제이다. 세째로 대학은 學的 訓練을 가진 學者의 모임(community of scholars)으로 學問研究를 위한 自由를 보장받는 일이다.

이상에서 열거된 大學의 價值 德目들을 中心으로 한국의 대학들은 어느 정도의 積極的인挑戰과 價值 蔚藤을 겪어 왔는지를 논의하기로 한다.

## 2

해방 이후 한국의 대학들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대학의 量的 張창 속에서 質的으로 어떻게 대학의 學問의인 높은 標準을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朝鮮朝를 통해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成均館의 教育의 傳統은 30여 년간에 걸친 日本의支配下에서 歷史的인 斷絕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방 이후 우리는 거의 황무지 속에서 우리의 대학교육을 건설해 가야만 하였던 것이다. 거기마다 대학이 안정되어 가기도 전에 3년간에 걸친 6·25 동란을 통해 다시 대학 파괴의 쓰라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전쟁에 의한 파괴의 時期에는 量은 質만큼 중요하다고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말한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대학 건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대학 발전을 위한 量的인 成就였다.

그간 한국 대학은 학생 정원의 量的인 張창과 質的인 통제 문제를 둘러싸고 약간의 몸부림을 쳐 왔다. 1955年 8月 大統領令(第1063號)에 의

한 大學設置基準令의 制定과 1965年 12月 大學學生定員令의 制定 公布와 그리고 1969年の 国가적인 大學 入學資格豫備考查制度의 施行 등 일련의 大學政策은 1950年代의 自由放任의in 大學生定員政策에 修正을 가하고 効果的인 大學生定員制度의 採擇을 의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大學의 質的 改善을 실현하려고 努力했던 것이다.

그러나 1970年代 서울의 人口增加 抑制政策과 관련하여 地方大學의 育成策이 발표되고 일반적인 大學施設과 教授陣의 弱勢에도 불구하고 地方大學에 대한 優先的인 學生定員 配當으로 학생 수의 많은 增加를 보게 되었다. 또한 1981年 卒業定員制의 採擇과 더불어 入學定員의 30% 증가 모집으로 인해 前年度에 비해 入學定員의 51%가 되는 10만 5천 명이 늘어나 학생 수는 31만 1천 명으로 增加되었다. 1984年 해방 당시와 비교할 때 教授數에 있어서는 1,500여 명의 약 23倍가 되는 약 34,000여 명이 되었지만, 大學生의 數에 있어서는 해방 당시의 7,800명의 약 153倍가 되는 약 119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학은 量的으로 놀랄 만한 많은 發展을 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의 일각과 사회 일부에서 한국 대학의 학문적 수준의 저하가 마치 質을 쟁여낸 量的인 成就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같은 사람들은 대학교육의 質과 量을 서로 反對되는 別個의 概念으로 區別하고 있다. 그러나 抽象的인 質의 개념은 具體的인 量을 통해서 評價되는 것이다. 따라서 質이란 量의 균형(balance)을 意味하고 또한 質은 量의 선택(selection)을 의미한다. 따라서 量의 成就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령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세계적으로 둘째 간다고 하여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英·獨·佛과 같은 전통적인 西方國家 大學의 성격이 少數의 精銳分子를 위한 指導者 양성에 관심이 큰 데 비해서 우리의 대학이 大衆化된 中間階層의 形成을 통한 民主的인 社會指導力의 養成이 된다고 해서 大學教育의 質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대학의 量的 供給이 需要를 能가한다고 하여 大學의 量的 結果가 否定되는 것도 아니다.

大學이란 단순히 既成職場을 메우기 위한 것만도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직장을 만들기 위한 곳이기도 하다.

진정 대학교육의 學的 水準은 量的 發展이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된다. 예컨대前述한 바와 같이 해방 이후 대학생의 量的 증가는 153 배가 되었는데 같은 기간에 있어서의 教授의 數的 增加는 불과 23 배가 된다는 것은 대학교육의 質에 연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地方大學 育成策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생 정원의 많은 증가가 교육 시설이나 교수의 채용 문제와 서로 균형을 잃을 때 대학교육의 質은 떨어지고 높은 학문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게 된다. 量的으로 한국의 大學 進學率이 세계에서 거의 최우위에 속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大學을 나온 學·碩·博士들이 그 이름에 상응하는 實力과 가지고 張出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大學은 學問的인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教授評價面, 學生評價面, 研究施設 確保面에서 엄격한 선별 작업이 있어야 한다. 英國 大學은 質的인 統制를 통해 一定한 學問的인 標準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대학의 교수들이 서로 다른 대학의 학생들의 학업 결과를 시험하고 直接 또는 間接으로 教授相互間에 교수의 결과를 評價하고 論評하는 ‘同僚敎授相互評價制度(quality control by peer surveillance)’를 가진다.<sup>1)</sup>

學問의 量的으로 優越한 大學은 學生數와 教育 內容에 適合한 施設의 확보와 학생 수에 均衡된 教授陣과 엄격한 教育 프로그램과 學生評價가 있어야 한다. 教授陣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국 대학은 교수 1人當 학생의 비율은 國·公立大學이 31 명이고 私學이 41 명, 平均 약 1:37이다. 學科當 전임 교수를 많이 요구하는 이공계 대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全國 228 개 學科中 그 64%에 해당하는 146 개 學科가 學科當 전임교수 5 명 이하를 가지고 있다. 學生 1人當 公教育費도 한국 대학은 先進國의 1/6 未滿이다.

한국 고등교육에서 私學에 다니는 學生의 比率이 약 80%이다. 많은 私學財團이 教育哲學의 인 配慮에서보다는 實利的인 運營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무리가 아님 것은 한국의 私學은 거의 全的으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學科增設이나 學生定員 增員의 경우도 教育的인 必要나 國家·社會의 인 요청보다는 경제적 實利面에서 文教部로부터 認可 可能性 如否가 표준이 되고 있다. 예컨대 人文과 自然의 入學定員이 1971년에는 44:56 이고, 1979년에는 47:53이던 것이 1981년 畢業定員制에 의한 入學定員의 急增에 따라 人文과 自然의 比가 反對로 61.7:38.3로 逆轉되어 버렸다. 自然科學이 國가적으로 社會적으로 강조되어 온 현실과는 달리 대학 운영상의 實利面에서 人文分野의 많은 增員이 있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質的 向上을 위한 量的 均衡에는 私學에까지도 國가적인 재원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GNP 對比 公教育費가 日本은 1983년에 5.7%이고 美國은 1985년에 6.7%이며 自由中國이 1984년 4.2%이다. 그런데 우리는 1986년에 3.3%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대학교육의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最小限 教育개혁심의회의 최종 보고서<sup>2)</sup>에서 제시한 바 2001년에 4.7%가 그보다 훨씬 앞당겨져야 되겠다는 우리의 희망이다.

學生定員政策, 教授確保問題, 教育內容의 質管理, 教育施設의 擴充改善의 문제 등은 대학교육의 수준 향상에 절대적인 요소이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들은 우선 급한 대로 大學의 建物을 늘리고 또한 學生數의 絶對的인 增加를 위해 文教部와 써름하는 것이 대학 발전을 위한 努力인 奈 스스로 自慰해 왔다. 그러나 그 建物들을 채울 실험실과 도서관은 빈약하고 그 많은 학생들이 따라야 할 學問의 訓練에는 소홀해 왔다. 그리하여 量的 균형 속에서 教育의 質을 찾으려는 積極的인 挑戰과 진지한 價值의 葛藤도 별로 없이 政府와 文教部, 재단과 대학 행정 당

1) Burton R. Clark, *The Higher Education System: Academic Organizatio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246.

2) 教育개혁심의회, 「최종보고서 Ⅲ : 21세기를 향한 한국교육」, 1987년 12월 31일, p.85.

국의 관료 조직 체제 속에서 대학의 自律權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대학의 形式만 갖추어 오지 않는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大學의 自律性과 民主化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序論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自律性의 문제는 中世大學의 시작과 더불어 대학의 중요 屬性으로 생각되어 왔다. 오늘날 大學自律性의 획득과 民主化의 실현은 모든 大學人們은 물론 사회 일반에 있어서도 하나의 當爲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自律화의 具體的인 實現에 대해서는 많은 形態가 가능하고 따라서 그 선택을 위한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아무리 한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 民主化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每事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 사회가 절서 있고 능률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형태의 참여 형식이 가능할 것이다. 누가 권위를 가지고 全體의 구성원을 위해서 조직체를 이끌어 갈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된다. 大學社會는 여러 가지複合的인 성격의 사람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설사 구성원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全體로부터 위임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임된 권위가 어떻게 파생되며, 또한 누구에게 위임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Clark은 대학을 관리하는 세 가지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는 中世의 匠人(guild) 制度에서와 같이個人의 學問的인 訓練에 기초된 것으로 이는 국가가 부여한 보호된 권한으로個人的인 支配의 特權이 인정된 것이다. 예컨대 강좌제도(chair-based system)의 주임 교수와 같은 권위이다(guild authority). 둘째는 단과대학과 같은 교수 조직을 통해서 동료 교수들의 투표나 혹은 대학의 上級行政家의 任命에 의해서 대학으로 주어진 支配力(collegial rulership)이다. 그리고 세번째는個人的인 學的 訓練이나 組織體의 인정이 아니고一定한 地位에서 나오는 관료적인 권위(bureaucratic authority)이다. 이같은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에 따라 몇 가지 통제 형식이 나을 수 있다.

첫째로 이태리, 불란서, 스웨덴과 같은 유럽 대륙 형태는 匠人制度와 관료주의 제도를 결합한 것으로 政府次元에서 관료적으로 대학 학과장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理事會와 같은 것은 없다. 관료성이 높다고 하지만 의사의 결정권이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래서 이루어진다.

둘째 형태로는 교수와 理事會와 大學 行政이 결합된 것으로 英國이나 美國이 여기에 속한다. 英國的 形態는 Oxford와 Cambridge 대학의 운영에서 보는 것처럼 각 大學에自治力이 주어진다. 영국의 경우는 정부 관료는 힘이 적고 교수와 대학 행정가의 힘이 강하다. 美國式 形態는 영국과는 달리 理事會와 大學 行政當局의 힘이 강하고 교수들의 발언권이 약하다. 그러나 영국보다는 덜 관료적이고 地方分權의이다. 私立大學은 완전히 獨립적이고 문교부의 힘은 없다. 自律의 인 조정을 위해 州立大學은 이사회와 행정과의 사이에 仲介的인 Board of Control이 있다. 決定權은 많은 부분이 下部組織인 單大의 學部에 놓여 있다. 日本은 유럽형과 미국형을 결합한 통제 방식이지만 유럽에 가깝고 정부 관료의 지배 아래 있다지만 東京大學과 같이 主任教授의 權限은 대단한 것이고 소속인들에 대한 支配力 또한 크다.<sup>3)</sup>

이처럼 大學의 自律性은 대학 운영에 대한 意思決定權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지난 날 政府次元의 劃一的인 관료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大學의 自律화는 마치 大學外의인 權威나 支配에서 벗어나기 위한 갈등으로만 定義되기 쉬웠다. 그러나 大學의 自律화와 관련된民主的인 意思決定의 참여 방식은 多樣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난 날 우리는 대학의 민주적인 自律性 문제를 둘러싼 抵抗運動은 있었지만 가치 갈등은 거의 없었다. 大學의 自律性은 대학 운영의 民主化를 통해서 可能하다. 意思決定의 過程이 多樣化하고, 참여의 기회가 多邊化하고, 대학 운영상의 권위와 힘이 조직의 下部單位에 포함되는 그 程度에 따라 大學의 自律화와 民主화는 併行되어 간다고 생각된다.

세째로 大學의 自由를 위한 갈등에 대해서 알

3) Clark, *op. cit.*, pp. 107~134.

아 보기로 한다. 역사적으로 대학에 있어서 自由를 위한 努力은 크게 두 가지 侧面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학을 外部의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지키려는 투쟁에 가까운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自由를 위한 대학 内的인 노력이다.

먼저 大學의 知的 自由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外的으로 學問 研究의 自由와 研究 結果에 대한 발표의 自由이다. 大學은 真理를 탐구하는 學問의 장소인 만큼 그 研究 結果에 正直해야 한다. 때로는 研究 結果가 당시의 政府나 宗教나 기타 執權勢力의 權威에 反對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學問 研究와 研究 結果 발표에는 절대적인 自由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자유는 이미 前述된 바와 같이 外的으로 行政的인 侧面에서의 대학의 自律性이 보장되어야 한다.

中世 西歐社會의 大學들은 대학의 自由, 특히 自律을 획득하기 위하여 많은 투쟁의 과정을 밟았다. 과거 Paris 대학이 法皇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世俗王과 손을 잡고, 가까운 僧院長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먼 곳에 있는 法皇에게 기꺼이 예속되고, 市長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는 大學을 他地域으로 옮겨 가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自由를 위한 大學內 努力은 교육과정의 문제, 교수 내용 방법상의 문제 등에 관계된다. 中世大學의 경우는 교육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자유가 있었으나 神學과 哲學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다. 1247年 Master Raymond는 神學上의 과오로 투옥되었다. John de Brescain은 논리학 교수상의 과오로 教授職을 잃었다. 神學과 異敎徒的 哲學간의 투쟁이 벌어지고 Abelard는 Aristotle의 논리를 神學에 적용했다고 많은 박해를 받았다.<sup>4)</sup> 文藝復興期의 독일 대학에서는 학자들 사이에 스콜라 철학과人文主義 사이의 많은 갈등과 투쟁이 계속 되었

던 것을 우리는 본다.<sup>5)</sup>

한국 대학의 경우 外的 간섭에서의 自由 획득을 위한 투쟁은 미약하지만 部分的인 抵抗運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大學 内的인 교육과정의 개선이나 교수 방법의 개혁 등 保守主義的 力에 대한 自由主義的 갈등은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그래서 한국 대학의 大學 内的 學問의 自由를 위한 투쟁과 갈등은 微風마저 느끼지 못한 채 大學의 教育의 自由는 거의 질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學問의인 높은 標準을 위한 量的 均衡 위에 선質의 확보와 外的 간섭의 배제와 内的 권위 관계의 民主化를 통한 大學의 自律性 유지와 그리고 學問 研究의 自由와 教育 内的 여러 要素의 自由로운 改革을 통한 自由精神의 신장은 大學 發展을 위해 必須의이다.

해방 이후 40여 년간 政治·經濟·社會의 變動期에 처해서 한국 대학 역시 교육적 가치의 혼동, 교육 이념상의 저항, 교육 정책적인 변화 등에 直面했던 것이다. 大學은 그간 可視的인 量的 變化를 초래했고 外的인 自律화와 自由를 갈망하는 소리는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국 대학교육을 둘이켜 볼 때 大學 發展을 위한 大學 内的인 改革에의挑戰이나 가치 갈등의 문제를 둘러싼 知的이고 批判的인 논쟁이 결여되어 왔다.

한국 대학의 위기는 학원의 무질서와 소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 대한 심각한 가치 갈등이나 신중하고 지성적인 批判 없이 一方的으로 강요된 秩序나 單純한 價值 實現을 하니의 解決策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安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4) Charles Homer Haskins, *The Rise of Universities* (Ithaca, New York: Great Seal Books, 1957), pp. 52~53.

5) James H. Overfield, *Humanism and Scholasticism in Late Medieval German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247~298.